

참고 3.

코로나19 정책지원 종료시 기업 대출의 잠재 신용손실 추정 및 평가

코로나19 이후 정책당국의 다양한 지원조치¹⁾ 등에 힘입어 기업대출의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지만 대출 건전성 지표는 실물경기 충격에도 불구하고 양호해지는 등 과거 거시경제 악화 시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정책지원 효과로 기업대출 부실이 이연되면서 건전성 지표가 실제 부실 가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BIS²⁾도 은행의 기업대출 건전성이 실물경기와 디커플링되는 현상을 부도 갭(bankruptcy gap)으로 지칭하고, 정책지원 종료시 신용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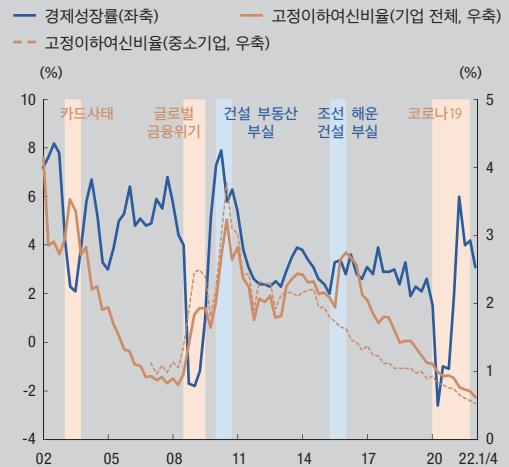
이하에서는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가 종료될 경우 국내은행 전체 기업대출의 신용위험이 표면화될 가능성을 점검하는 한편 잠재 신용손실 규모를 추정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정책지원 종료 시 국내 은행 기업대출의 잠재 부실화 가능성 점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중 부도 갭과 원인

코로나19 충격 시 경제성장률의 큰 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 기업대출의 부실이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축소되는 부도 갭(bankruptcy gap) 현상이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카드사태 당시 부실 여신비율이 경제성장률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부의 관계³⁾를 보였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경제성장률¹⁾ 및 기업대출의 고정이하여신비율²⁾



주: 1) 전년동기대비 실질GDP 성장률

2) 고정이하여신/총여신(국내은행 분기말 기준, 이하 동일)

자료: 한국은행,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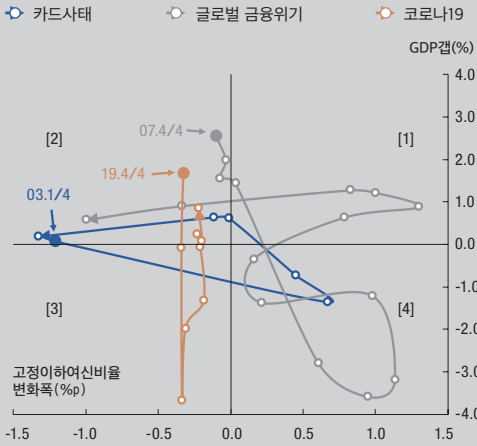
또한 코로나19 시기에는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이 증가하는 과정 없이 경기회복과 함께 NPL비율이 낮은 상태(그림의 2사분면)로 바로 진입하는 패턴을 보였다. 경기충격 시 NPL비율이 상승(4사분면)하고 경기회복과 함께 하락(2사분면)하는 순환패턴이 나타났던 과거 위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보인다.

1)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조치로는 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시행(20년 4월~21년 12월말 은행권 지원실적은 약 177조원, 22년 9월 종료 예정), ② 대출 관련 규제 완화: ㉠ 바젤Ⅲ 최종안 조기시행(20년 6월, 당초 23년), ㉡ 예대율 완화(기준 100%에서 105%, 22년 6월 종료 예정), ㉢ 코로나19 피해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해 기존 자산건전성분류 기준 유지 등이 있다.

2) BIS Bulletin No.40.(2021, "Liquidity to solvency: transition cancelled or postponed?"), BIS Bulletin No.46.(2021, "Could corporate credit losses turn out higher than expected?") 등은 코로나19의 실물경기 충격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금융완화 및 지원 조치 등으로 인해 기업 부도율이 이례적으로 낮은 상황을 "COVID-19 Bankruptcy Gap"으로 지칭하였다.

3)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코로나19 이전까지는 경기변동 진폭이 크지 않았고 건전성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과 고정이하여신비율 간의 관계가 과거에 비해 다소 약화되었다.

경기상황¹⁾과 고정이하여신비율²⁾ 간 순환패턴



주: 1) 분기 실질GDP를 HP필터링으로 추출한 순환성분을 추세성분으로 나누어 산출한 갭 기준
 2) 전년동기대비 변화폭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이러한 부도 갭 현상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금융지원·완화 조치와 더불어 신용시장이 대체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금융지원 조치에 더해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양호한 자본비율⁴⁾ 등이 부실여신 발생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요주의 및 고정이하여신 발생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신규 연체액이 코로나19 이전 3.4조원(18년 1/4분기~20년 1/4분기 평균)에서 코로나19 이후 2.5조원(20년 2/4분기~21년 4/4분기)으로 빠르게 축소되었다.

- 4) 자본비율이 낮을수록 위험가중치가 높은 기업대출을 늘리는 데 제약이 따르는데, 국내은행 총자본비율이 바젤III 최종안 조기시행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15년말 13.9% → 19년말 15.3% → 21년말 16.5%)함에 따라 코로나19 당시 위험가중자산 확대에 역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5) 금융불안지수(FSI)가 2020년 2월 9.1에서 2020년 4월 24.4(위기단계, 1개월)로 상승한 후 2020년 10월 9.6으로 하락한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동 지수는 2008년 12월 57.5의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2008년 9월~2009년 6월까지 위기단계를 지속하였다.
- 6) 글로벌 금융위기 시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가 365bp(08년 4/4분기 평균) 확대된 데 반해 코로나19 시에는 74bp(20년 2/4분기) 확대되었다.
- 7) BIS Quarterly Review(September 2021, "Covid-19 policy measures to support bank lending")는 풍부한 신용공급(ample credit supply)을 부도 갭의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중소기업 대출의 신규 연체액¹⁾

(조원)

| | 2018 | | 2020 | | | | 2021 | | | |
|--------|------|-----|------|-----|-----|-----|------|-----|-----|-----|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 |
| 신규 연체액 | 3.5 | 3.4 | 3.4 | 2.9 | 2.7 | 2.6 | 2.4 | 2.3 | 2.1 | 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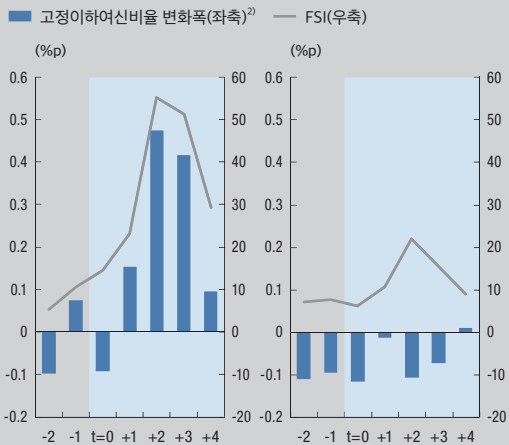
주: 1) 2018~19년 자료는 기간중 분기 평균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금융불안지수(FSI)가 위기단계(22)를 일시적으로 소폭 상회(24.4)⁵⁾하는 데 그치고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해 낮은 상승 폭⁶⁾을 보였다. 이에 따라 기업 자금조달 여건⁷⁾은 금융위기 시에 비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금융불안지수(FSI)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글로벌 금융위기¹⁾>

<코로나19¹⁾>



주: 1) 기준시점 t=0은 2008년 2/4분기 및 2019년 4/4분기
 2) 전분기 대비
 자료: 한국은행,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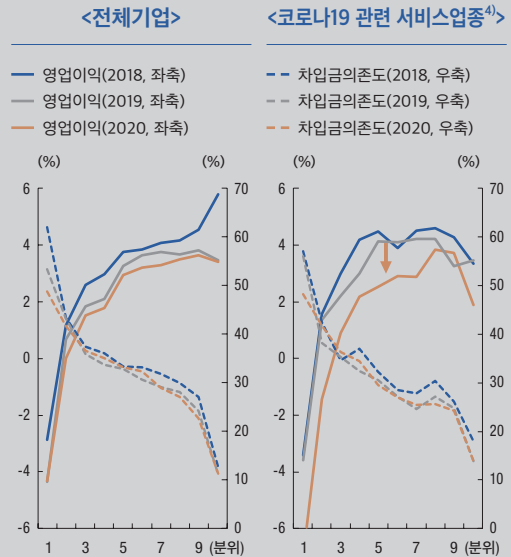
이에 더해 은행의 완화적 대출태도⁸⁾, 대출금리 하락 등에 따른 양호한 신용공급 여건⁹⁾도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따른 신규부실 발생을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지원 종료 시 기업대출의 부실 가능성 평가

최근 국내은행 기업대출의 양호한 건전성 지표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정책효과 등으로 신용 리스크를 과소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향후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등 금융여건이 변화할 경우 업황 개선이 더딘 정책수혜 기업을 중심으로 그간 누적된 잠재부실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영업실적 악화와 더불어 기업규모 중하위 기업¹⁰⁾, 소비자 대면 서비스업 영위기업¹¹⁾을 중심으로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가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의 부실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외감기업의 기업규모별¹⁾ 영업실적²⁾ 및 차입금의존도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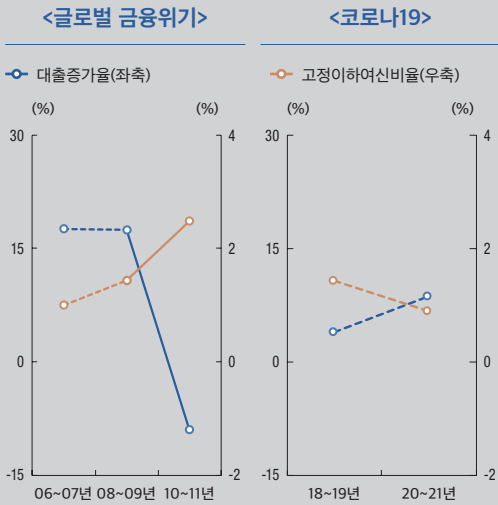


주: 1) 외감기업의 규모를 총자산 크기 기준으로 10개 분위로 구분
 2) 총자산 대비 영업이익(손실)
 3) 총자산 대비 차입금(사채 제외)
 4) 숙박음식, 도소매, 여가서비스, 개인서비스, 교육서비스, 사업지원 및 운수·창고 업종
 자료: KIS-Value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2010년)에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조치¹²⁾ 축소, 기업 구조조정 등과 함께 부실여신이 증가¹³⁾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정책지원 종료 시 부실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 더욱이 향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금융완화의 정도가 축소되는 가운데 국내경제 회복 흐름이 제약될 경우 부도 갭이 축소되고 부실여신이 확대¹⁴⁾될 수 있다.

8) 2020년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국내은행 기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는 평균 11.3으로 양의 값을 보였다.
 9) 명목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이 2019년말 101.3% → 2020년말 110.3% → 2021년말 114.7%로 큰 폭 상승하였으며 국내은행 총여신 증가율도 2017~19년중 3.3%(기간중 분기 평균)에서 2020년중 9.6% → 2021년중 7.8%로 확대되었다.
 10) 외부감사대상 기업(18~20년 평균 22,542개, 코로나19 관련 서비스업종은 5,268개)을 총자산 규모 10분위로 구분하였다.
 11) 숙박음식, 도소매, 여가서비스, 개인서비스, 교육서비스, 사업지원 및 운수·창고 업종을 기준으로 하였다. BIS Bulletin No.40 (2021)은 코로나19 충격이 소비자 대면 기업(consumer-facing firms)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12) 금융위원회(2013년 12월 24일,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FTP) 연장 및 제도개선」)에 따르면 2008년 10월부터 만기연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FTP)을 통해 중소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지원(09년 기준 24.1조 원)한 바 있다.
 1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년(전년동기대비 7.3%, 08~09년중)에 비해 가파른 대출(중소기업 기준) 감소세(-6.7%, 10~11년중)와 함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상승(1.3% → 2.5%)하였다.
 14) 코로나19에 대응한 금융지원조치가 없는 경우를 가정하여 2003년 1/4분기~2019년 4/4분기중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이하 동일), 기업대출금리 변화 폭, 요주의여신 증가율 및 고정이하여신 증가율 순으로 설정한 4변수 Structural VAR(2)로 충격반응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1.0%포인트 하락할 경우 고정이하여신액 증가율은 충격 시점부터 2분기 동안 각각 4.2%포인트, 3.8%포인트, 2.3%포인트, 미래 부실위험이 잠재한 요주의여신액 증가율은 3.2%포인트, 4.6%포인트, 4.3%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업대출 증가율¹⁾²⁾ 및 고정이하여신비율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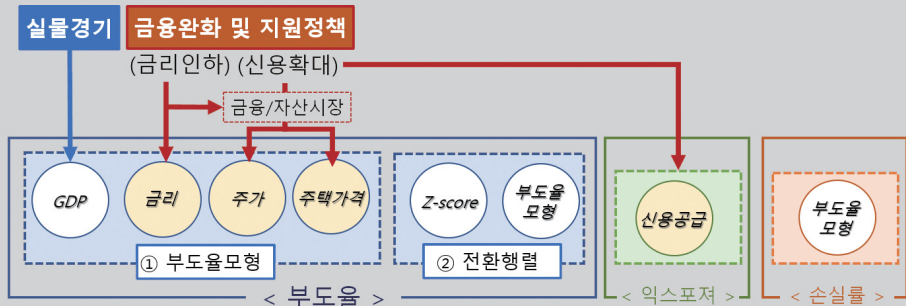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2) 기간중 분기 평균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잠재 신용손실 추정 방법 및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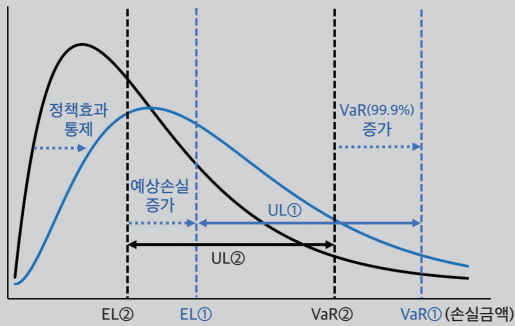
추정 방법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효과 등으로 드러나지 않은 기업대출의 잠재 신용손실을 예상손실¹⁵⁾과 예상 외손실¹⁶⁾로 각각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먼저, 코로나19 기간중(20년 1/4분기~21년 4/4분기) 금융지원조치에 따른 주요 거시 경제변수(금리, 신용공급, 주택가격, 주가 등)의 변화를 정책효과로 간주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부도 갭으로 나타난 기업대출의 잠재 신용손실을 정책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신용손실¹⁷⁾(①)에서 정책효과가 반영된 신용손실¹⁸⁾(②)을 차감(①-②)하여 시산하였다.

- 15) 예상손실은 과거 경험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손실로, 부도율, 익스포저, 손실률의 곱으로 산출된다. 부도율 모형에서는 부도 갭 추정을 위한 거시 설명변수로 경제성장률, 금리, 주가, 주택가격 등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대출채권의 신용상황이 시점에 따라 변화하는 확률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 시점(t)의 대출채권이 특정 단계(정상, 요주의, 고정이하 등)에서 다음 기(t+1)에 다른 단계로 변화할 확률을 나타내는 전환행렬(3X3)을 활용하였으며 부도율 모형 및 Z-score(전환행렬에 담긴 정보를 시점별로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는 통계값)를 통해 추정하였다. 익스포저는 신용공급의 함수로 가정하고 등급별, 기업규모별로 산출하였으며, 손실률은 부도율의 선형함수로 추정하였다. 이외의 세부적인 예상손실 추정 방법은 IMF의 방법론(IMF WP 2021, "Expected credit loss modeling from a top-down stress testing perspective")을 참고하였다.
- 16) 예상외손실은 발생확률은 낮으나 발생 시 예상손실을 뛰어넘는 손실로 "99.9% 유의수준의 손실규모(VaR)-예상손실"을 의미하며 부도율, 익스포저, 손실률, 대출자산간 상관계수로 구성된 바젤III의 내부등급법 K함수로 추정하였다.
- 17) 금융완화 및 지원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변수 중 금리 및 신용공급은 코로나19 기간중 변화분 전체를 정책효과로 간주하여 코로나19 기간중 코로나19 이전 추세(19년중 평균)가 지속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주가 및 주택가격의 경우에는 구조벡터자기회귀모형(SVAR)을 통해 코로나19 기간중 정책효과를 식별(historical decompose)하여 제거한 시계열 데이터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 18) 코로나19 이후 실제로 나타난 거시경제변수의 원 시계열 데이터를 모형에 반영하여 신용손실을 시산하였다.



정책효과 통제¹⁾에 따른 신용손실²⁾ 분포³⁾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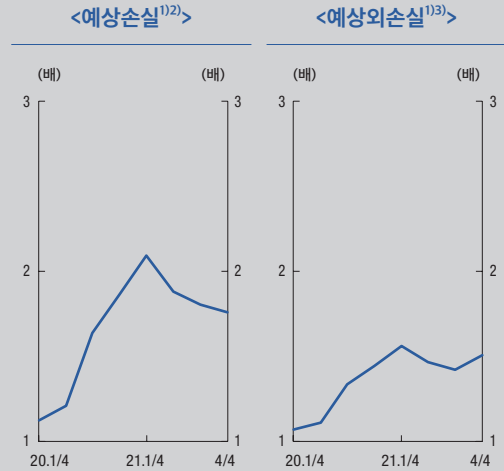


- 주: 1) 코로나19 기간중 금리 및 신용공급의 변화분을 정책효과로 반영하고 정책효과 통제 시에는 이를 식별하여 제거
 2) EL은 예상손실을, UL(VaR-EL)은 예상외손실을 의미
 3) 청색 그래프는 정책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신용손실 분포를, 흑색 그래프는 정책효과가 반영된 신용손실 분포를 의미

추정 결과

코로나19 정책효과를 통제한 결과, 국내은행의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은 정책효과가 포함된 경우에 비해 각각 1.6배(20~21년 평균), 1.3배 증가하였다. 또한 이러한 손실이 현실화되면 국내은행 자기자본 비율이 최대 1.4%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책효과로 축소되어 있던 신용위험이 부도율 상승¹⁹⁾ 등으로 큰 폭 증가하면서 신용손실 분포의 우측 꼬리부분이 두터워지고 손실 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관련 정책효과 통제시 신용손실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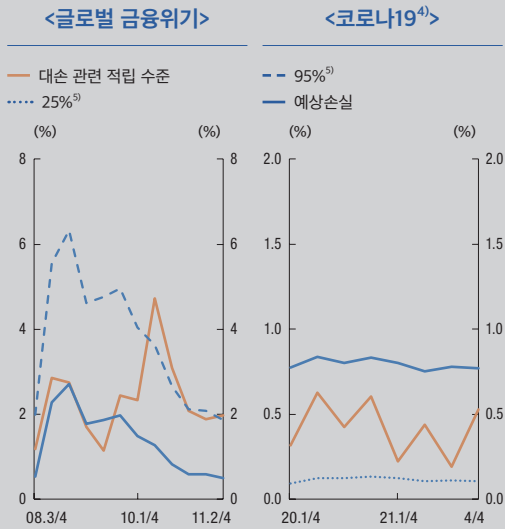


- 주: 1) 각 시점의 향후 1년간 손실 기준
 2) 예상손실(정책효과 통제)/예상손실
 3) 예상외손실(정책효과 통제)/예상외손실
 자료: 한국은행 시산

한편, 신용손실 분포와 대손 관련 적립²⁰⁾ 수준을 비교해 보면, 코로나19 기간중에는 대손 관련 적립 수준이 신용손실 분포의 하위 25~45%에 머무르면서 예상손실(신용손실 분포의 평균 수준)을 하회하였다.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동 적립 수준이 신용손실 분포의 상위 75~95%에 달하였다.

19) 정책효과 통제 시 부도율이 2020년 4/4분기에 최대 1.5%까지 상승하여 정책효과가 반영된 경우(1.0%)에 비해 0.5%포인트 상승한 가운데, 동 기간중 미래 부실 위험이 높은 요주의여신이 부도로 전환되는 확률이 크게 상승(4.7% → 9.9%)하였다.
 20) 미래 예상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대손충당금 순적립액, 대손준비금 전입액 등의 합계로 정의하였다.

대손 관련 적립 수준¹⁾²⁾ 및 예상손실¹⁾³⁾



- 주: 1) 기업 익스포저 대비 비율
 2) 대손충당금 순적립액 및 대손준비금 전입액 등의 합계
 3) 각 시점의 향후 1년간 손실 기준
 4) 정책효과 통제시 예상손실
 5) 각각 신용손실 분포의 95% 분위값과 25% 분위값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시산

평가 및 시사점

코로나19 기간중 금융지원조치 등으로 나타난 부도 갭 현상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기업대출 건전성 지표는 신용리스크를 과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 정책효과를 통제하여 잠재 신용손실을 추정한 결과, 부도율 상승 등으로 신용손실 분포의 꼬리 부분이 두터워지면서 예상손실 및 예상외손실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미래 손실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도 과소 적립²¹⁾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금융지원·완화 조치가 종료될 경우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잠재 신용손실이 현실화되면서 대손비용 증가 및 자기자본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국내은행은 향후 잠재 신용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개선하여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하는 한편 손실흡수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신용손실 추정 시 은행별로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평가가 향후 경기전망, 위기상황, 정책효과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이 과소 적립되지 않도록 관련 모범규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효과 등으로 예상손실이 과소 산정될 수 있는 시기에는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비율(감독목적충당금)의 상향 조정²²⁾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1) 은행들은 대출채권 등에 대해 신용손실 분포 상의 기대신용손실(예상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회계기준)하고, 동 금액이 자산건전성분류에 따른 예상손실 금액(감독기준)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별도 적립하고 있다.

22) 2006년에는 기업, 가계 등의 정상 및 요주의여신에 대한 최저적립률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2007년에는 기업 정상여신의 최저적립률을 업종별로 차등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